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고사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국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제 1은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복지 정책을 설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출제하였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문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공정과 정치에 대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담은 제시문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에 나타난 공정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자금 대출 관련 시사 이슈에 적용하여 비판적 분석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과세와 복지를 함께 고려할 때 선별 복지-선별 과세의 A 방안과 보편 복지-보편 과세의 B 방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이 두 대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만 떼어서 보면 A안과 B안이 크게 다르지만, 조세와 지출을 묶어 함께 고려할 경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바람직한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논하려면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자원 마련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 교과서:

- 김진영 외(2018), 『경제』(pp. 63~66),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pp. 47~54), 천재교육
 - 유종열 외(2018), 『경제』(pp. 53~58), 비상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pp. 154~156), 동아출판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pp. 154~164),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pp. 138~139), 비상
- 제시문 <나>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가상국가의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현재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정확충 문제, 대상이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로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평성, 평생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평생연금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 확충 방안의 부재, 노인연금 예산이 도입초기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다. 당초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보편적 복지제도가 자원과 예산 등의 이유로 현재와 같은 선별적 복지제도로 바뀌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을 유발한다. 다음으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보여준다. 노인 연금과 달리 평생연금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낸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평생연금 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다. 또한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평생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노인연금을 삭감당하고 평생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오히려 다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을 제시문은 보여주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pp. 164~167), 동아출판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pp. 154~164), 미래엔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pp. 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pp. 246~260),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pp. 181~189), 비상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pp. 232~235), 창비
- 제시문 <다>는 유교사상을 정립한 공자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공정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공자는 하·은·주 삼대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유교사상을 정립하였으며, 이 유교사상은 동양의 도덕, 교육,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지혜와 가치를 제공해왔다. 공자가 활동했던 주나라 말기는 기존의 사회 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고 패권을 잡기 위한 제후국들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혼란기였다. 공자는 인간 존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도덕 성립의 근거로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서 공자는 정치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를 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봤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사회를 부와 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망국의 조짐이 엿보이는 난세로 규정했다. 그의 개혁안은 공정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이상 정치의 상징인 요순시대를 탐구했던 정약용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야말로 성왕들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덕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임무를 부여한 후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윤리와 사상』(pp. 39-40; p. 57; pp. 166~169), 지학사
 - 황인표 외(2018), 『윤리와 사상』(pp. 179-182),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pp. 254~259), 동아출판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pp. 232~235), 창비
 - 김동환 외(2018), 『국어』(pp. 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8), 『국어』(pp. 174~197), 미래엔
- 제시문 <라>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루고 있다. 대학 교육은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계층 이동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그 비용은 점차 개인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면 남은 금액을 탕감해주는 등 공적 자금으로 학생들의 대학 교육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적 장치로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일시적인 탕감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과도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일괄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제시되어 있다. 반면, 개인의 대학 교육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에 대한 반대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불만 등이 드러나 있다.

관련 교과서: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pp. 164~167), 동아출판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pp. 172~176), 지학사
- 유종열 외(2018), 『경제』(pp. 181~184), 비상
- 김진영 외(2018), 『경제』(pp. 179~180),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pp. 186~187), 천재교육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pp. 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pp. 246~260),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pp. 181~189), 비상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pp. 232~235), 창비
- 김동환 외(2018), 『국어』(pp. 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8), 『국어』(pp. 174~197), 미래엔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제시문 <가>~ <라>
	성취 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제시문 <가>~ <라>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나> <라>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2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제시문 <가> <나>
과목명: 고전읽기		관련	
성취 기준 1	[12고전02-03]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을 재해석하고 고전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p. 169)	제시문 <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p. 41)	제시문 <나> <라>
성취 기준 2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p. 39)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1] 동·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p. 59)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2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p. 59)	제시문 <나> <라>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p. 131)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p. 133)	제시문 <다> <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p. 220)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p. 220)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 3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p. 220)	제시문 <가> <나>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p. 250)	제시문 <나> <라>
성취 기준 2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p. 250)	제시문 <나> <라>

나) 자료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교과서 등)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63	교과서	○
조세와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세 방향	홍순만	문우사	2021	351-353		○
How to increase Taxes on the Rich	Mankiw, N.G.	The MIT Press	2021	137-140		○
‘노인연금’,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금진호	쿠키뉴스	2022.04.25			○
평생연금 개혁한다는데... 선진 외국은 어떻게 했다.	서한기	연합신문	2022.08.29			○
국민 50% “평생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보다 수급 연령부터 올리자”	허난설	경향신문	2022.08.04			○
올해 조세부담률 23.3% '사상 최대'...내년엔 감세로 하락	한종수	파이낸셜 뉴스	2022.09.12			○
공정(公正)을 생각한다.	백민정	다산연구소	2022.08.22			○
아시아의 MZ세대와 사회변화(1) 다산 정약용의 공정론과 MZ세대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2022.05.23			○
“오바마도 43세까지 고등 속에 살았다” - 미대학생 괴롭히는 무서운 이 녀석	이상규	매일경제	2022.09.03			○
미학자금 빚 탕감에 ‘실끌’ --- 백악관, 의원 저격까지	조슬기	아시아경제	2022.08.28			○
바이든, 400조원 학자금 빚 탕감 승부수 — 공화 “대표 행위”.	문병기, 김현수	동아일보	2022.08.26			○
Do Americans support President Biden’s student loan plan?	Galston, William A.	Brookings	2022.09.06			○
Who really benefits from student-loan forgiveness?	Demas, Jerusalem.	The Atlantic	2022.04.28			○
What is the impact of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Patel, Dee.	PennToday.	2022.08.31			○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 is Poorly Targeted	William J. Luther	AIER	2022.08.29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평생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백혜연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평생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책세상	2021			○
조선후기 실학과 다산 정약용	김용흠	혜안	2020			○
공자에서 다산 정약용까지 유교 인문학의 동서철학적 성찰	임현규	파라아카데미	2019			○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정책 분석	고장완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Your Questions, Answered	Ron Lieber and Tara Siegel Bernard	The New York Times	2022.08.29			○

※ 참고자료는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를 명기하며, 교과서 자료와 교과서 외 자료로 구별하여 제시함.

문제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제시문 <가>를 통해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A안과 B안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을 듯 하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인 K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이 600만원으로 두 대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만 떼어서 보면 A안과 B안이 크게 다르지만, 조세와 지출을 묶어 함께 고려할 경우 두 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조세 정책의 방향성 혹은 자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부한 후 혜택을 받는 평생연금과 달리, 선별적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인연금의 월지급액이 평생연금과 연계될 경우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세를 통한 선별 복지'와 '보편 과세를 통한 보편 복지' 정책이 서로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어떻게 과세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별 과세 - 선별 복지'를 선호하기도 하고, '보편 복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자원 마련에 대한 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K씨 사례의 분석을 통해 A안과 B안에서 순 혜택이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생연금 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평생연금과 노인연금을 동시에 받지만 평생연금 연계 제도로 인해 수급하는 연금의 액수가 낮아지는 노인층의 상대적 불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연금의 자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하여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의 논제는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개념과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일시적 탕감 정책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이해하는 지혜의 정수로써, 현재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시해준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대조적인 개념에 대하여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찬반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추가: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반의견을 분석하거나,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공자의 관점은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를 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동안 성실한 노동의 댓가로 학자금 대출을 미리 갚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관점에서 노력에 따른 대우를 공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한 대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를 통해 공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고 그러한 시각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시각에 기초하여 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시각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갖는 효과성과 그 한계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자의 관점을, 능력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약용의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의 찬반 논란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제시문 <가>의 복지와 과세에 대한 두 안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나>의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가>에서 복지와 과세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K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순 혜택이 600만원으로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파악한다.
- 둘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가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적연금인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위 30%의 평생연금 가입자와 두 연금의 동시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한다.
- 셋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해야 하며, 노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문 <가>를 통해서 유추한다.

문제 1

- ①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②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으로 인해 평생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③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 <가>에 제시된 조세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문제 2】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의 공정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올바르게 비교하여 요약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가 주장한 절대적인 평등의 관점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정약용이 주장한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혹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는가? •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인 55%가 넘는 대학 졸업생들 부채 완화와 더불어 대학 비진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파악한다.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대학 진학자들의 대출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정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개인의 대학 교육 비용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불공정에 가깝다. 반면,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 실행상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다.

문제 2

- ①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하여 요약한다.
- ② 가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나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③ 제시문 <라>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 답안

문제 1

- 제시문 <가>에 나타난 A안과 B안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연 소득 2,000만원인 K씨의 사례에 적용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만을 따져보면, 두 가지 안이 모두 순 혜택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세와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A안과 B안에서 모두 소득자에게 동일한 순 혜택이 제공되므로, 두 정책의 차이는 찾을 수 없다.
- 제시문 <나>에는 노인연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평생연금 개혁과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 문제, 노인연금 수급자와 평생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한 노인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불공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문 <가>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보다는 복지 혜택과 재원마련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한다.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보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연금이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 재정이 확보되어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면,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인연금 수급자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한편 증세가 어렵다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위해 노인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지급되는 40만원 보다 적은

돈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노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연령을 60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 2

- 가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불공정한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또한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탕감해주는 것 또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나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즉,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 이 정책은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중,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든 부채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